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-4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조례 인용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 정비

나.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용도 확대 및 연체이자율 적용 변경

다. 기금운용의 효율성·투명성 확보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금 운영상 일몰제 적용 규정 신설
-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

라.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

## 3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변경

나. 구 예산부족 및 기금운용의 안정성으로 자활기금 재원 중 국민기초

- 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삭제 (안 제2조 제6항)
- 다.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 가능토록 기금용도를 신설하고,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삭제 (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, 제12항, 제13항)
- 라. 기금일몰제를 적용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마.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바.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시설 및 기관 당 7천만원 까지 확대하고,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5%로 변경(안 제10조 제3항, 제5항)
- 사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8. 19. ~ 2015. 9. 8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 사전심사 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어느 하나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6. (삭 제)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어느 하나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3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

### 4. (삭 제)

5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

나.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

제3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제3조제10호 중 “임대보증금 자금”을 “임대보증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제15조제1항제5호의3”을 “제15조제1항제7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

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(삭 제)

13.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(단,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)

제4조제4항 중 “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필여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,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150%이하인 저소득주민”을 “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(삭제)

제9조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”으로, “이상인 자활공동체를”을 “ 이상인 자활기업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(삭제)

제10조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체당”을 “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당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업자금”을 “임대보증금”으로, “3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제1항 ”를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또는 자활공동체에”를 “또는 자활기업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”을 “또는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</u>	6. (삭제)
7. ~ 8. (생략)	7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<u>각 호와</u> -----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</u>	3. <u>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</u>
4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</u>	4. (삭제)
5.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(단, 기금의 해</u>	5.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</u>

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 
로 한정한다)

6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또는  
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  
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  
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  
는데 필요한 비용

가.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 
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 
나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  
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

7. ~ 9. (생략)  
10.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 
자금 대여  
11.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 
따른 자산형성 지원  
12.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 
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등  
에 대한 출연

<신 설>

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 
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
지원

나.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  
건비 지원 등

6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가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 
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
나. ----- 대  
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7. ~ 9. (현행과 같음)  
10. -----임대보증금  
대여  
11. -----제15조제1항제7호 -----  
-----  
12. (삭제)

13.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전  
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기능





<p>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<u>필여한</u> 사항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대상 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·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.</p> <p>1.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,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 득인정액의 150%이하인 저소득 주민</p> <p>2.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1조에 따른 <u>자활공동체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제9조(대출의 범위) ① 제7조제1호 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 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 상으로 한다.</p> <p>1. <u>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</u></p> <p>2. <u>천재지변,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</u></p>	<p>1. -----<u>관한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<u>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 층</u></p> <p>2. ----- -----<u>자활기업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대출의 범위) ① (<u>삭제</u>)</p>
---	--

3.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  
상의 재학생 등록금

② 제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 
대출은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수  
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  
체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 
대출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조성  
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한다.

④ (생 략)

제10조(대출 및 상환) ① 제9조제1  
항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  
활안정자금의 대출은 2천만원 이  
내로 하되, 2년 거치 2년 균등분  
할 상환한다.

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활공동  
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  
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,  
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.

③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금  
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3천만원  
이내로 하되, 5년 거치 5년 균등  
분할 상환한다.

④ (생 략)

② -----  
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
은 자활기업 -----  
----- 이상인 자활기  
업을 -----.

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 
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 
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 
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대출 및 상환) ① (삭제)

② -----자활기  
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  
기업당 -----  
-----.

③ -----임대보  
증금 -----7천  
만원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.

제12조(중복대출의 금지) 대출을 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출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출할 수 없다.

제13조(대출금의 반환)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5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이율 5%의 범위

⑤ 제2항 -----  
-----  
----. 다만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 5%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

⑥ 제2항 -----  
-----  
-----.

제12조(중복대출의 금지) -----  
-----또는 자활기업은  
-----.

제13조(대출금의 반환) -----  
-----또는  
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-----

-----자활기업-----

-----.

③ -----

자활기업이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의 발생요인 : 세출예산 증가

- 제10조제3항 : 제9조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,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
- 임대보증금 대출금액 변경 : 3천만원→7천만원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계하였음
- 3개 지역자활센터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2016년	2차년도 2017년	3차년도 2018년	4차년도 2019년	5차년도 2020년	합 계
세입	대여이자	1,200	1,200	1,200	1,200	1,200	6,000
	소계	1,200	1,200	1,200	1,200	1,200	6,000
세출	임대보증금대출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	소계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
### 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임대보증금 대출금액 증가분(4천만원)×3개 지역자활센터

### 5. 재원조달 방안

#### 1)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2016년	2차년도 2017년	3차년도 2018년	4차년도 2019년	5차년도 2020년	합 계
일반회계		-	-	-	-	-	-
특별회계		-	-	-	-	-	-
자활기금	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합계	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
#### 2)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: 자활기금 기조성액 활용

### 6. 작성자 : 사회복지과 사회7급 이선미(☎2600-6145)

# 사전 규제심사 검토의견서

## ☐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☐ 개정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☐ 주요내용

- 자활기금 용도 확대 및 연체이자율 변경
- 기금 일몰제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
-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 확대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

## ☐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장치 마련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 가 번 호	2015-24				
자 치 법 규 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류제혁
입안주무부서	사회복지과	통 보 ( 조 치 ) 일		2015. 8. 20.	
관 련 조 문	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	
-		원안동의		-	

<b>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</b>				
관리번호	2015A서울강서027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사회복지과		
	담당자명	이선미	전화번호	02-2600-6145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5년 08월 19일	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사회복지과)	<p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등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</p> <p>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해당사항 없으며, 성별균형 참여 등 개선 필요성이 없음</p>	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<p>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반영,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</p> <p>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</p>			
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09월 07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박찬숙/02-2600-6769)</p> <p><b>사회복지과장 귀하</b></p>				

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-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

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